의안 번호	127

진해신항 및 웅동2동 배후주거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배명갑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진해신항 및 웅동2동 배후주거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배명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

발의연월일 : 2026. 10. 14.

발 의 의 원 : 배명갑・강길순・강창석・곽은정・김동엽
김우진・김원일・박강우・박연정・박찬열
백승규・이무식・장병운・정은미 의원(14명)

1. 제안 이유

○ 창원특례시 진해구 웅동2동은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에 직접 인접한 지역으로 대규모 공동주택과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으나, 항만 하역작업, 각종 개발공사, 대형 화물차량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 경상남도 용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부산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로 창원시 경화동(15㎍/㎥)보다 크게 높게 나타남. 과거 환경실태조사 (부산신항 20㎍/㎥, 배후주거지역 18~20㎍/㎥)에서도 확인되듯 신항 주변 대기질 집중 관리가 시급함.

○ 그럼에도 신항 인근 웅동2동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의 청소차 운행이 주 1회 수준에 불과하여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청소・살수 확대가 절실한 실정임.

○ 이에 관계기관이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항만 개발・운영에 따른 환경부담이 주민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항만 및 배후주거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도심지역과 차별화된 별도의 집중 대기질 관리체계 구축 및 상시 측정망 확충을 촉구함.

○ 신항 배후단지 내 사업장・공사장・대형 화물차 등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AMP 확대 등 항만 내부 오염 저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함.

○ 관계기관 간 역할・예산・추진일정을 담은 가칭「진해신항・웅동2동 대기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건강권과 생활환경 보호대책을 정책 수립 시 우선 반영할 것을 촉구함.

3. 건 의 문: 붙임

4. 수 신 처: 대통령(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경상남도지사, 창원특례시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부산항만공사장

진해신항 및 웅동2동 배후주거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항만의 성장이 주민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진해신항과 부산항 신항은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동북아 물류 중심항만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의 성장과 물동량 증가는 항만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환경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은 신항과 바로 인접해 있고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어 항만 하역작업과 대형 화물차량 운행, 각종 항만개발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실제 경상남도가 마련한 「대기환경 및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자료를 보면 2025년 부산항 측정망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는 20㎍/㎥로 경화동의 15㎍/㎥보다 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신항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에서도 PM-2.5 농도가 부산신항과 부산글로벌물류센터 인근에서 각각 20㎍/㎥, 신항중앙고 배후주거지역에서 18㎍/㎥로 조사됐다.

이는 신항 주변지역의 대기질을 단순한 일반 도심지역과 동일하게 관리해서는 안 되며, 항만과 배후주거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집중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항만과 대형 화물차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웅동2동 신항 배후 아파트단지 주변의 도로 청소차 운행이 주 1회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 화물차가 지나간 뒤 도로에 쌓인 먼지는 다시 차량 통행과 바람에 날려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되돌아온다. 도로를 청소하고 살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비산먼지 저감대책이다. 주민들이 매일 먼지를 마시며 생활하고 있는데 청소차가 일주일에 한 번 지나가는 수준이라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진해신항 개발은 앞으로 계속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항만이 커지고 물동량과 차량 통행량이 증가할수록 주변지역의 환경부담 역시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문제가 더 커진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스스로 2026년 목표를 ‘안전하고 깨끗한 부산항’으로 설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친환경 항만 조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정책 효과는 항만 내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항만 바로 옆에서 생활하는 웅동2동 주민들의 삶의 공간까지 깨끗해져야 진정한 친환경 항만이라 할 수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부산항만공사는 서로 관할과 책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항만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국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항만 인근 주민들이 감내해 온 환경적 부담을 더 이상 당연한 희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항만은 성장하는데 주민들은 먼지를 마시며 살아야 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진해신항 및 웅동2동 배후주거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공동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진해신항 및 부산항 신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비산먼지가 인접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웅동2동 배후주거지역을 포함한 상시 대기질 측정·관리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창원특례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2동 신항 배후 아파트단지와 대형 화물차량 통행도로의 청소 실태를 점검하여 현재 주 1회 수준인 청소차 운행을 대폭 확대하고 살수차를 상시 투입하는 한편, 배후단지 내 사업장·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라.

하나. 부산항만공사와 항만 관계기관은 친환경 선박 전환, 육상전원공급설비 확대, 친환경 하역장비 전환, 선박 저속운항 등 항만 내부의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효과가 신항 인접 주거지역의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라.

하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한 관할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공동으로 가칭 「진해신항·웅동2동 대기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사업·예산·추진일정을 명확히 담은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라.

2026년 10월 30일

창 원 시 의 회